 금융위원회	보 도 참 고 자 료				• 생산적 금융 • 신뢰받는 금융 • 포용적 금융
	보도	배포시	배포	2017.12.10(일)	
책 임 자	외교부 북핵정책과		담 당 자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손 성 은 (02-2100-1730)			김동현 사무관 (02-2100-1739)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이 형 렬 (044-215-4750)			홍광표 사무관 (044-215-4754)	

제 목 : 우리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지정

□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12.11(월)부로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

○ 해당 단체 및 개인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

※ 제재대상(단체 20개·개인 1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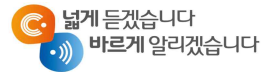
단 체 (20개)	
- 라선국제상업은행	- 조선아연공업총회사
- 농업개발은행	- 대원산업회사
- 제일신용은행	- 송이무역회사
- 하나은행	- 러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
- 국제산업개발은행	- 조선금별무역
- 진명합영은행	- 능라도룡악무역회사
- 진성합영은행	- 조선남남협조회사
- 고려상업은행	- 조선능라도선박회사
- 류경상업은행	- 대봉선박회사
- 조선컴퓨터센터	- 조선유성선박회사
개 인 (12명)	
- 김수광(駐 벨라루스 경찰총국 요원)	- 김동철(만수대창작사 소속, 나미비아 소재)
- 김경혁(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 차승준(고려금강은행 소속, 중국 소재)
- 박철남(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 허영일(하나은행 소속, 중국 소재)
- 리호남(류경상업은행 소속, 중국 소재)	- 지상준(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 이성혁(고려은행 소속, 중국 소재)	-곽정철(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 김영수(원양해운 소속, 베트남 소재)	- 럽희봉(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냄으로써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계획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 금융위는 공협법*에 따라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관련자를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로 지정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08.12월 제정)

- (제한내용)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는 ①금융거래시, ②재산권 (동산, 부동산, 채권 등) 처분시 금융위의 사전허가 필요
- (제재내용) 허가 없이 해당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한대상자) 현재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 1,328개 개인·단체를 제한대상자로 지정 중

지정 근거	지정절차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공협법§4① 1호 국제법규의 성실한 준수	①해당 UN 안보리 위원회의 제재자로 등재 ⇒ ②공협법상 제한대상자로 자동 지정	UN안보리결의	대상자 수
		1267/1989/2253호 (ISIL, 알카에다)	개인 256, 단체 80
		1988호(탈레반)	개인 135, 단체 5
		2231호(이란)	개인 23, 단체 61
		1718호(북한)	개인 63, 단체 53
		계	총 676 (개인 477, 단체 199)
공협법§4① 2호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	①타국의 요청 또는 자발적 선정 ⇒ ② 기재·외교·법무부 동의 ⇒ ③고시	총 652개 개인·단체 지정 ※ 대북독자제재 166개(개인 97, 단체 69) 개인·단체 포함	

※ 금융거래등 제한(금융위)와 외국환거래 제한(기재부) 비교

구분	금융거래등 제한	외국환거래 제한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법§4① 제한대상자 지정고시(금융위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환 거래법§15②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9① 지급영수허가지침(기재부 고시)
지정방식	법무부·외교부·기재부의 동의를 거쳐 금융위가 지정	외교부·통일부·산업부·금융위의 협의를 거쳐 기재부 장관이 지정
허가필요 행위	제한대상자와 금융회사간 금융 거래 또는 재산권 처분행위	제재대상자와 거주자·비거주자간 외국환거래
허가절차	금융거래등시 금융위 사전허가 필요	외국환 거래時 기재부장관(한국은행) 사전허가 필요